

구미지역경제

ISSUE FOCUS

Vol. 54 (2021. 08.)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1
02 국내외 경제이슈	6
03 국내외 정책이슈	14

[FOCUS]

01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24
-------------------------	----

작성 : 오현주 선임연구원
(hjoh@geri.re.kr)



지능형 제조공장과 액화수소로 산단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8일 경남 창원에서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과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한 후, 에너지산업(풍력발전, 가스터빈) 현장을 방문
- 이번 방문은 스마트그린산단 1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의 성공적인 개소를 통한 산단의 스마트화 촉진과 함께,
- 수소경제의 핵심기술인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지자체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국내 주요 에너지 산업인 풍력발전기와 가스터빈 생산기업 임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 】

-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은 스마트그린산단 1호 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산단 스마트화의 핵심 인프라임
- * 추진경과 : ('20.11)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 ('21.7) 데모동 개소, ('21.末) 시험동 완공 예정
- 창원산단의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 분야 기업들의 시제품 생산과 공정개발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가공조립·검사 모듈라인이 구축되어 기업과 산단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문승욱 장관은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이 근로자와 대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 됨과 동시에 자라는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 밝히며,
- 전자기술연구원과 스마트산단사업단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첨단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산업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 】

- 이어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창원시 두산중공업 부지에 구축되는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하고 두산중공업 내 풍력발전 제조공장과 가스터빈 부하 시험 공장을 방문
-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는 스마트그린산단 정책의 일환인 산단환경개선펀드의 투자를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만든 첫 번째 액화플랜트로서, 경남 지역 액화수소경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22.12월 완공 이후 실증을 통해 수소버스 300대 분량인 연간 1,800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여 창원 지역 수소 충전소에 공급할 예정
- 산업부는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안전 규정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중소·중견업체의 액화수소 R&D 지원 등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01 국내외 기술동향

과기정통부-국방부, 디지털 뉴딜 추진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확산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공고한 협력체계가 마련
 - 과기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8월 17일, 국방부에서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체결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ICT 및 국방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ICT R&D사업 전문기관 등이 참석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명준 원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윤태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성배 원장 등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이에 따라, 협약에는 국방 ICT R&D 고도화와 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양 부처 간의 다양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음
- 국방 ICT R&D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
 - 군 전력 첨단화 등으로 국방 ICT R&D의 규모와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ICT R&D 전문기관인 IITP 내에 국방 ICT지원단을 신설하여 R&D 추진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발굴기획, 사업집행 관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
 - 지원단에는 국방 ICT 정책·기획·평가 3팀을 둬. 인력은 IITP뿐만 아니라 KIDA, ETRI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IITP의 R&D사업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기존 ICT R&D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
- 민간의 DNA(Data, Network, AI) 신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선도 적용함. 이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 국방전략(가칭)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국방 ICT R&D 전용사업 신설도 추진
 - 국방민간 모두에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R&D 전 주기를 양 부처가 공동 관리. R&D 결과물이 실증을 통해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전 군에 확산되고, 실제 전력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전력화 예산을 활용한 연계전략을 추진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 우수기술은 민간에도 적극 이양하여 민간기술 실증 → 군 전력화 → 민간 이양 및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
- 전략에는 군 유무선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
- 국방 광대역 통합망(M-BcN) 고도화, 상용망 기반의 5G 이동통신 도입,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고성능 컴퓨팅·머신러닝 적용 등을 위한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 고도화 방안 등을 검토
- 군장병에 대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지원
 - 병사 및 전역 예정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군 복무중 AI·SW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전역 이후에는 정부 AI·SW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후속 교육, 취·창업 지원 등을 연계하여 연속성 있는 경력관리를 지원
 - 장교·부사관 등 장기 복무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화 교육이 제공될 예정
 - 양 부처는 금년 하반기중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함
- 이밖에도 양 부처는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교류 및 R&D·실증·확산사업 협력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현대화 등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 전 영역에서 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각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민간 기술개발의 통합 거버넌스 시도로서 양 부처 협업과 통합 R&D 등을 통해 한 팀이 되어 신속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군은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 뿐 아니라 초기시장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
 - 그리고 군 장병 AI·SW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
-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에 추진해온 양 부처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 향후 진행될 양 부처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중국 칭화유니그룹 파산 등 반도체 시장 위기와 기회 주목

○ 칭화유니그룹

- 중국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칭화대가 과학기술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해 1988년 설립한 첫 산학연계 기업으로 칭화대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칭화홀딩스가 지분 51%를 보유
- 2013년 이후 중국 반도체업체 스프레드트림과 RDA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잇달아 인수해 중국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으로 부상
-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기업 인수 △인재 영입 △D램·낸드플래시 생산 공장 설립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 성장
- 산하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사 양쯔메모리(YMTC), 모바일 칩 설계회사 유니SOC 등을 두고 있어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

【 (위기) 中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그룹 파산 현실화, 중국 반도체 굴기 난항 】

- 칭화유니그룹의 채권자인 휘상은행은 베이징 법원에 파산 구조조정 신청(7.11)
- 칭화유니그룹이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모든 부채를 갚기에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파산중정(법정관리) 신청서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제출
- 2020년 11월 13억 위안(약 2,300억 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해 첫 디폴트를 선언한 칭화유니그룹 총 채무는 2,029억 위안(약 35조 9,000억 원)으로 추산
- 칭화유니그룹은 2019년 2022년 D램 양산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 내 기대를 받았지만 원천기술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파산절차에 돌입
- 메모리 반도체, 클라우드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매년 크게 늘린 반면 글로벌 선두 업체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쌓지 못하면서 위기 직면
- 또한 한국 대기업처럼 지주회사를 통해 핵심 자회사를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바꾸지 못한 것도 위기 초래
- 대규모 자금 동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한 반도체 시장에서 단기간 집중 투자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입증한 셈
- 칭화유니그룹 파산으로 중국 반도체 자립 달성은 차질 예상
 - *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기업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도 곧바로 부도로 이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칭화유니그룹 회생에 개입 가능성도 대두
- 한편, 칭화유니그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룹 계열사의 일상적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기회) 차세대 반도체 개발, 회사 설립 등 반도체 산업 자립화 노력 여전 】

-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개발) 상하이 아토신 마이크로전자, 엔플레임 등 중국 반도체 업계는 2021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반도체칩을 대거 공개(7.8)



01
국내외
기술동향

< 중국 반도체 업계가 '21 세계인공지능대회에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 >

기업	내용
상하이 아토신 마이크로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세대 스마트카메라에 사용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카메라칩 공개 저렴한 가격에 하이실리콘 제품의 처리능력보다 3~5배 이상 향상
엔플레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2세대 인공지능 칩 DTU를 공개
상하이 바스타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인공지능 추론칩 공개
바이트댄스, 핑터우거, 텐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발표

-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IC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는 수입 의존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독자 개발하는 등 자급률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칩 시장은 외국 기업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업계가 글로벌 선진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며 추격 중
- (새로운 반도체 회사 설립) 중국 최대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과 중국 최초 애플 OEM 기업 렉스웨어정밀이 각각 새로운 반도체 회사를 설립

< 중국 기업의 반도체 회사 설립 내용 >

기업	내용
차이나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쑤성에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전문 자회사 신성테크 설립 신성테크의 등록 자본금은 5,000만 위안(약 88억 원)으로 차이나 모바일이 100% 출자했으며 사업 범위는 스마트카 장비 제조, 스마트카 장비판매, 전자부품 제조 등이 포함 신성테크를 통해 모든 사물의 상호 연결을 주도하고 사회 디지털 지능형 변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렉스웨어정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쑤성에 자본금 3억 위안(약 530억 원)의 반도체 생산 전문 자회사 설립

-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국가기업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공장 건설 등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었던 칭화유니그룹은 전문 기술력 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난 등으로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까지 영향 가능
- 반면 일부 기업은 부품소재 및 생산시스템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독자 개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반도체 자립화 노력에 박차
-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일본미국 등 최근 반도체 산업 패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바, 이들이 가져올 시장 변화와 다양한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만전
-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차세대 기술 선점, 전문 인력 확보,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협업 모색 등 과감한 투자와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아태지역에서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 모색 ('21.07.28.)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8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워크숍을 개최

< 워크숍 개요 >

- 일시·장소 : '21.7.28(수) 10:00~13:00, 소공동 롯데호텔(36F, 영상회의장)
- 참석 : APEC 회원국 기업인, 연구자, 정부 통상정책 담당자 등 40여명
- 주요내용 : ① **디지털 혁신에 따른 GVC의 변화 트렌드**
 - (발제1) 반도체 산업에서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Gary Gereffi Duke대 교수)
 - (발제2) GVC내 디지털 기업의 부상과 코로나 대응(조제한 KIET 박사)
- ② **기업 관점에서의 디지털 경제 GVC**
 - (발제1) 글로벌 다국적 기업(김기수 포스코연구소 소장)
 - (발제2) 스타트업(김연호 Visual Camp 지사장)
 - (발제3) 한국 기업(최정석 KT 차장)
- ③ **정책 관점에서의 디지털 경제 GVC**
 - (발제1) 미국(Stephen Ezell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부회장)
 - (발제2) 대만(Chen Ho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이사)
 - (발제3) 한국(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 우리 정부는 APEC에서의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 오고 있음
 - 금번 워크숍은 우리 정부가 APEC 차원의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이행을 위해 제안한 사업의 일환**
 - * 2017년 인터넷·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 APEC 차원의 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채택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AIDER)
 - ** 정부는 금번 워크숍 결과 등을 종합하여 2021년도 APEC 정상회의에 성과사업 결과를 보고할 예정
- 금번 워크숍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
 - 1세션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및 코로나 상황 하에서 디지털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 논의
 - 2세션에서는 기업 관점에서 스타트업, 다국적 기업 등의 대응에 대해 논의
 - 3세션에서는 정책 관점에서 미국, 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사례를 기초로 논의
-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코로나로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GVC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정부 등의 대응을 점검해 보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향후에도 정부는 디지털 경제 관련 APEC 차원의 정책협력을 강화하는데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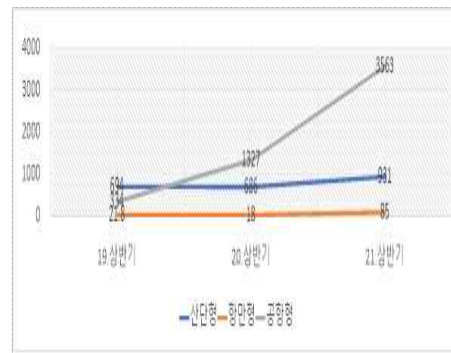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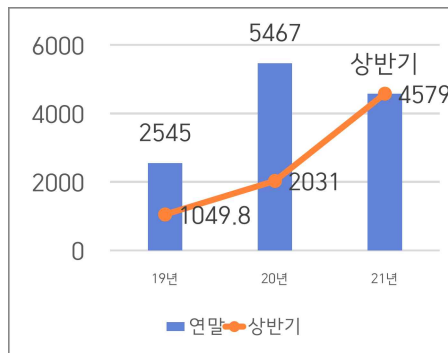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2021년 상반기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동향(잠정) ('21.0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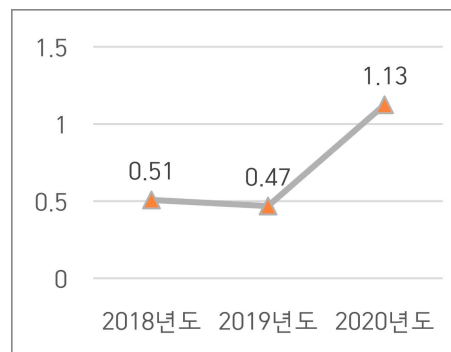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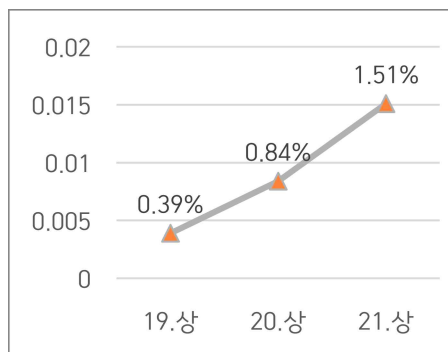
- (총괄) 자유무역지역 '21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5.5% 증가한 45.8억 달러
 - 산단형(35.7% ↑)·공항형(168.5% ↑)·항만형(372.2% ↑)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항형(인천공항) FTZ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가 특징
 - * 전년대비 증가액 : 산단형(686→931백만달러), 공항형(1,327→3,563백만달러), 항만형(18→85백만달러)
 - 전년대비 25.5억달러 증가액 중, 공항형(인천공항)이 22.4억달러로 반도체 분야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가 주요 요인
 - * 최근 3개년도 : ('19.上)1,049.8백만달러→('20.上)2,031백만달러→('21.上)4,579백만달러
 - ** 최근 3개년도(연말기준) : ('18)3,074백만달러→('19)2,542백만달러→('20)5,767백만달러



< FTZ전체 수출액추이(백만달러) >

< 유형별 수출액추이(백만달러) >

- (국내대비) 우리나라 상반기 전체 수출액(3,032.4억달러)의 1.51% 수준으로 전년도 실적(0.84%) 대비 수출 비중 확대
 - * FTZ수출액/전체수출액 : ('19.上) 0.39% → ('20.上) 0.84% → ('21.上) 1.51%



< 국내수출액 대비(상반기기준, %) >

< 국내수출액 대비(연도말기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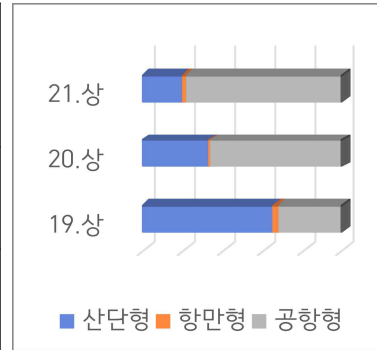
- (유형별) FTZ 전체 수출액 중 공항형 비중이 77.8%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산단형 20.1%, 항만형이 1.9% 차지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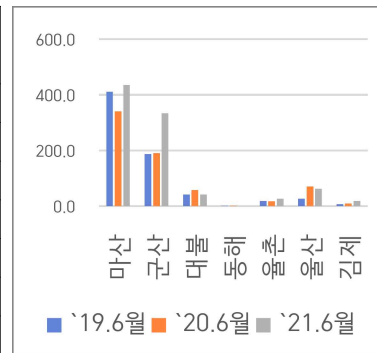
구분	'19.상	'20.상	'21.상
산단형	694 (66.1%)	686 (33.8%)	931 (20.3%)
항만형	21.8 (2.1%)	18 (0.9%)	85 (1.9%)
공항형	334 (31.8%)	1,327 (65.3%)	3,563 (77.8%)



< FTZ 유형별 비중(백만달러, %) >

- ❶ (산단형) '21.6월 기준 수출액은 전년대비 35.7% 상승한 931백만달러
 - 마산·군산·울촌·김제 등 4개 관리원의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대불·울산·동해 등 3개 지역 감소

구분	'19.상	'20.상	'21.상	증감액	증감률
마산	411	341	435	94	27.6
군산	187	190	334	144	75.8
대불	42	58	56	△2	△3.4
동해	1	1	0	-	-
울촌	19	17	26	9	52.9
울산	27	70	62	△8	△11.4
김제	7	9	18	9	100
합계	694	686	931	245	35.7



< 산단형 최근 3개년 수출 실적(백만달러, %) >

- (마산) '20년 4분기부터 자동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회복세 이후, '21년 상반기 현재 전년대비 27.6% 상승한 435백만달러
- (군산) BPA(비스페놀-A) 시장가격 상승, 코로나 관련(백신용 주사가진단키트 등) 기업의 실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5.8% 상승한 144백만달러
- (울촌) '19년 이후 지속 수출 실적 증가 추세로, '21년 상반기는 수출 상위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전년 대비 52.9% 증가한 26백만달러
- (김제) 자동차기계류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대비 9백만달러 상승
- (기타) 코로나로 인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차질(울산), 조선 경기 불황(대불), 주요 수출기업 이전(동해) 등의 사유로 일부 관리원 실적 감소
- ❷ (공항형) 인천공항 FTZ내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의 수출 실적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68.5% 상승한 3,563백만달러
- ❸ (항만형) 광양항 소재 풍력발전기 부품 생산기업의 수출 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372.2% 상승한 85백만달러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 ('21.08.17.)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7일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민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계기로 개최
-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스클랴르 경제부총리, 삼룩카즈나 국부펀드 회장, 바이테렉 대표 등 정부와 기업인 22명, 한국 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22명이 참석

<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요 >

- 일시·장소 : '21.8.17(화) 14:30, 롯데호텔 크리스탈룸
- 주최 : (한) 무역협회, (카) 삼룩카즈나, 카자흐인베스트
- 참석 : (한) 산업부장관, 무역협회장, 주카자흐스탄대사, 삼성전자·두산중공업·현대건설·동일토건·롯데제과 기업인 등 22명
(카) 카자흐스탄 대통령,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제2부총리, 삼룩카즈나회장, 주한대사, 무역통합부·에너지부·보건부 장관 및 정부인사, 기업인 등 22명
- 내용 : 경제협력 분야별 주요 기업들의 사업현안 및 애로사항, 협력 강화방안 공유

-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기조연설 및 삼룩카즈나 회장과 한국 무역협회장의 개회사 이후, 양국 기업인들은 전자, 플랜트, 보건, 금융 및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현안 및 애로사항,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
- 본행사를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채널 구축,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합금철 공장 등 플랜트 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니켈·코발트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자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3건의 MOU를 체결
- 문승욱 장관은 양국이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을 토대로 산업·자원·에너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실질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해왔다고 평가하면서,
 - *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22) 협력 프로그램
- 우리 기업들에게 카자흐스탄 기업과 그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
- 문 장관은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의 수석대표로서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 개발부 장관과 함께 금년중 제10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우리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08.20.)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월 20일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 '21년 1~2차 추경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
- 안 차관은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인해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등을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1차 추경은 8월 17일 기준 관리대상(9.5조원)의 89.4%인 8.5조원이 집행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5개 현금지원사업(5.5조원)은 대부분 지급 완료*(95.4%)
 - *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방문·돌봄종사자 지원사업은 이의신청(8월말까지) 진행 중
 - ② 공고·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기타사업(4.0조원)은 8월 17일 기준 3.0조원(76.8%)으로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 추진
 - * 집행률 추이 : (6.30) 66.0% → (7.21) 70.8%(+4.8%p) → (8.17) 76.8%(+6.0%p)
- 2차 추경은, 8월 17일 기준 관리대상(20.9조원)의 13.6%인 2.9조원이 집행되었으며, 9월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
 - 우선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의 경우,
 -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상생 소비지원금(0.7조원)은 ①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②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8월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0.3조원)은 지원대상(296만명) 및 지급계좌 최종 확인을 거쳐 8월 24일 일괄 지급 예정
 - 희망회복자금(4.2조원)은 8월 17일 집행을 개시하여 사흘간 116.8만 소상공인 (65.6%)에게 2.8조원(65.8%)을 지급하였으며,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할 계획
 - 이 밖에 방역보강(3.4조원), 고용민생안정(2.3조원) 등 여타사업(6.0조원)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개시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
- 한편, 안 차관은 금번 3/4분기가 방역과 경제의 양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 강조하면서, 3/4분기는 다음 3대 분야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힘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❶ 코로나 상황 개선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
 - *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1.1조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등
 - ❷ 소상공인 피해재기 지원 및 창업·일자리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 * 택시기사(640억원)·버스기사(280억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0.1조원) 등
 - ❸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R&D*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 * 지역특화산업 육성 R&D(1,261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R&D(985억원)
- 더불어, 하반기에 247.1조원* 이상을 집행함으로써, 연말까지 역대 최고수준**인 총지출(604.9조원)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 * '20년 하반기 집행액 227.9조원 보다 +19.2조원 증가한 수준
 - ** 중앙재정(총지출) 집행률(%) : ('16) 95.2 ('17) 96.3 ('18) 96.7 ('19) 97.8 ('20) 97.7
- 이를 위한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통한 사업별 집행 애로요인의 선제적 점검 및 해소, 범부처·차치단체간 긴밀한 예산집행 협력체계 가동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 (참고) '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8월 17일)

(단위 : 조원, %)

구분	예산	집행(지급)	(%)
집행관리 대상 합계	20.9	2.9	13.6
①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4.9	1.2	8.0
❶-1. 상생 국민지원금	8.6	-	-
❶-2.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	0.3	-	-
❷-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	1.2	28.1
❷-2. 손실보상 법제화	1.0	-	-
❸ 상생 소비지원금	0.7	-	-
② 3종 패키지 외	6.0	1.7	27.6
❶ 백신·방역 보강	3.4	1.0	30.3
▶ 의료기관 손실보상	1.1	0.3	29.8
❷ 고용·민생안정	2.3	0.6	26.4
❷-1. 고용 회복 지원	0.8	0.09	11.5
▶ 신규일자리 창출	0.5	0.06	12.9
❷-2. 민생안정 지원	1.5	0.5	34.7
▶ 택배·버스기사	0.1	-	-
❸ 지역경제 활성화	0.3	0.03	8.4
▶ 지역사랑·온누리	0.2	-	-
비관리 대상	14.0	▶ 지방교부세(금) 12.2, 관광기금 재정보강 0.2 ▶ 해외백신 도입 1.5, 긴급복지 0.1 등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 및 양국 간 에너지장관 회담 개최 ('21.08.25.)

【 한-콜롬비아 무역·투자 포럼(8.25, 13:30)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25일 한-콜롬비아 무역·투자 포럼에 참석
 - 이번 행사는 국민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계기로 개최
 - 콜롬비아에서는 두케 대통령, 롬바나 상공관광부장관, 니콜라스 우리베 보고타 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19명, 한국 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30여명이 참석
- 콜롬비아 대통령의 기조연설 및 산업부 장관과 보고타상공회의소 회장 축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주한콜롬비아 대사의 개회사 이후, 한-콜롬비아 협력 유망 산업 및 진출방안 등을 논의
 - 본행사를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와 보고타상공회의소 간 한-콜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MOU 서명식을 갖고,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통해 정기적인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설명회 개최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문승욱 장관은 축사에서 2016년에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 한-콜롬비아 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으로 ①한-콜롬비아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 확대, ②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미래자동차 등 미래첨단 분야로의 협력, ③ 양국 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밀한 보건협력으로 경제활성화와 무역·투자 확대발전을 제시

【 한-콜롬비아 에너지장관 회담(8.25, 16:00)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디에고 메사 푸요 콜롬비아 광물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한-콜롬비아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 문 장관은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 이에 더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작년 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금년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NDC 추가 상향과 함께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
- 메사 장관은 콜롬비아 정부 역시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 아울러 올 하반기 중 국가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
- 아울러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음



홍남기 부총리, 5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미주개발은행(IDB) 간 협조용자 협정 체결 ('21.08.26.)

- 8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마우리시오 클라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는 서울, 워싱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미주개발은행(IDB) 간 협조용자 협정문(Agreement)에 각자 서명을 완료
 -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
 -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 이번 협조용자* 협정 체결로 협조용자 한도가 5억불이 대폭 증액되고 협력 기간도 '25년까지 연장**
 - * 중남미 내 유망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한 후 사업비를 분담하고, 이후 미주개발은행이 집행입찰 등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구조
 - ** (기존) '18~'22년간 3억불 한도(조기 소진) → (갱신) '21~'25년간 5억불 한도
- 특히, 이번 협정 체결은 '22년까지 설정되었던 기존 3억불 협력 한도가 조기에 전액 소진되는 등 그간 성공적인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
- 중남미는 언어적 장벽, 지정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발 수요*, 건설 분야 등 우리 기업의 진출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와 개발협력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지역으로,
 - * 미주개발은행은 전체 중남미 지역 개발을 위해 연간 6,500억불 수준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18년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 ** 우리기업 해외건설 수주액 중 중남미 지역 비중(국토교통부) : ('19) 0.6% (1.3억불) → ('20) 23% (68.9억불)
- 우리 정부는 그간 미주개발은행 협조용자를 통해 중남미 지역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 보건·의료 위기 등에 대응한 보건·사회 기반시설 분야 사업*에도 적극 참여
 - * (보건) 파라과이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 프로그램('20, 50백만불), (정보통신) 과테말라 소외지역 인터넷망 구축사업('20, 25백만불), (교통) 파라과이 농업 물류도로 개선사업('19, 50백만불) 등
- 이번 협정 체결로 기후 변화 대응, 정보통신(ICT), 민관협력사업(PPP) 등 국제사회 내 중요성이 높거나, 우리기업이 강점 있는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확대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개발 경험과 미주개발은행의 풍부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며, 개도국 정부 외에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미주투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 발표 (관계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산업부, 식약처, 소방청 등)는 우리나라가 정밀 의료소프트웨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8월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
- 과기정통부는 의료계, 의료소프트웨어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력으로 ①국민체감 성과확산, ②세계적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③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전략 11개 세부과제를 마련
- 먼저, 국민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전환을 지원하고, 닥터앤서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도입지원하며, 인공지능 구급차도 전국에 단계적으로 보급확산
- 두 번째, 세계적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케이-의료 데이터담과 닥터앤서 플랫폼을 개방하고, 기업들의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
- 마지막으로, 차세대 의료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닥터앤서소아과를 통해 소아 희귀질환의 진단범위를 기존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대책, 디지털 치료제 및 메디컬 메타버스 기술을 확보

【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 주요 내용 】

1. 국민체감 성과확산

-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핵심사업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인공지능구급차를 국민 생활 속에 널리 보급·확산하여 국민 체감성과 확산방안을 마련
 - 과기정통부·복지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 논의를 시작하고,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이용권 확대지원으로 의료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 병원 간 진료정보의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전국 8개 주요 거점 지역 상급종합병원 또는 건강검진센터를 중심으로 닥터앤서진료소(클리닉)을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를 보급·지원함으로써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고품질의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닥터앤서진료소는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활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성을 보조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한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복지부)과 소방정보시스템(소방청)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구급차의 전국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공모를 통해 초기 도입비(구급차 15대 및 의료기관 4곳 설치장비 예산)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전국 확산을 추진

* 과기정통부(기술개발, 초기확산), 복지부(제도), 소방청(확산협력)

- 응급의료센터까지 최적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여 한 사람의 응급환자라도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
- 1·2차 의료기관 및 군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닥터앤서2.0 (12대 질환), 닥터앤서밀리터리(9대 질환)를 개발하고, 암 전문 지능형 병리 분석 및 중환자 예후관리 지원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인공지능 적용 범위를 확대

2. 세계적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 국내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업이 신속하게 신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마케팅,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튼튼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
- 데이터댐(의료데이터, 인공지능hub.or.kr), 보건의료빅데이터 및 국가바이오빅 데이터 등 케이-의료데이터댐을 구축·개방
- 의료데이터의 가공, 인공지능학습 설계 등의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며, 닥터앤서 서비스 플랫폼을 공유하여 신생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

< 서비스 플랫폼 공유 전후 비교 >

구분	기존	닥터앤서 플랫폼
영업방식	개별 판매(영업망 한계)	공동 판매
운영방식	수요처 요구에 따라 제공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제공(SaaS)
장단점	개별 기업의 한정된 솔루션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솔루션 제공
해외진출	개별 솔루션 홍보 한계	다양한 솔루션 공동 홍보

-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기술(IT)기업 재직자 등에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여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닥터앤서 등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사용 의료기관 관계자 교육을 지원하는 닥터앤서 소프트웨어 스쿨도 추진

닥터앤서 소프트웨어 스쿨

- 교육대상 : 닥터앤서 사용 및 닥터앤서2.0 참여 의료기관 관계자 등
- 교육내용 : 닥터앤서 개론, 의료데이터 처리개론, 의료인공지능 개론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9개국에 상표 등록된 닥터앤서 상표를 케이-의료소프트웨어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국산 글로벌 플랫폼과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를 연계 해외진출을 지원

3.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 정확한 진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아희귀질환 진단, 감염병의 대응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약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의료 실습 및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 확장가상세계 기술확보를 지원

-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는 소아희귀질환에 대해 인공지능 적용 범위를 현재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여 환아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 주는 닥터앤서소아과 개발을 지원하여 소아희귀질환 인공지능 진단·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닥터앤서1.0) 2개 질환(발달장애, 난청) → (닥터앤서소아과) 8개 질환*, 진단율 10% 개선

** ①희귀유전대사질환, ②선천성 다발기형, ③뇌신경질환, ④유전성심장질환, ⑤유전성 신장질환, ⑥염증성장질환, ⑦선천성 면역결핍질환, ⑧소아혈액종양질환

- 또한 수년마다 반복되는 다양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대응, 유입차단, 역학조사 등 인공지능 기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감염병 환자의 예후관리에 인공지능을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 개선과 건강회복을 지원

- 약물 복용 없이도 유사한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고도화된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실증하며, 자폐장애·정서장애 및 중독장애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제를 우선 개발하며, 디지털 치료제를 위한 3가지 실감작용 핵심기술*도 개발 추진

* ① 개인 맞춤형 가상융합(XR) 트윈생성 및 시뮬레이션, ② 인체내부 생체정보 가시화, ③ 가상융합(XR) 상호작용

- 신경근골격계 질환자(뇌손상 등)에 대한 운동 가이드 제공을 위한 고정밀 의료 트윈 생성 및 모의실험 기술을 개발하고, 가상융합 트윈 기술을 의료 실습·훈련에 적용하여 군 응급 간호역량 강화와 민간 분야 확산을 지원

-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우리나라의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역량을 결집하고, 널리 확산하여 정밀의료 소프트웨어가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03

국내외
정책이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
 -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이번에 확정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 절차 등을 제시
-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였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

【 안건의 주요 내용 】

① 대내외 환경분석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

< 분야별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 >

구분	현황분석	미래예측
기술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우방국 중심 기술블록화, 기술규제 확대
경제	세계시장 지역화, 산업·일자리 격변	국가 간 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사회	인구절벽시대 진입, 비대면생활 일상화	지역소멸 현실화, 사회적 갈등 확대
환경·안보	탄소중립 노력, 위기의 일상화	환경보전·위기대응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기반 혁신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

< 최근의 주요국 정책동향 >

- (미국) 전략기술·기후변화 관련 투자확대, Endless Frontier Act 제정
- (중국) 8대 전략산업·7대 전략기술 설정,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 (EU) 연구와 혁신(R&I)을 위한 955억유로 R&D 투자, 6개 전략기술분야 자립화 추진
- (일본) 과학기술로 국가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정책의 법적근거·추진체계 정립

② 혁신정책 추진방향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R&D 혁신방안('18.7.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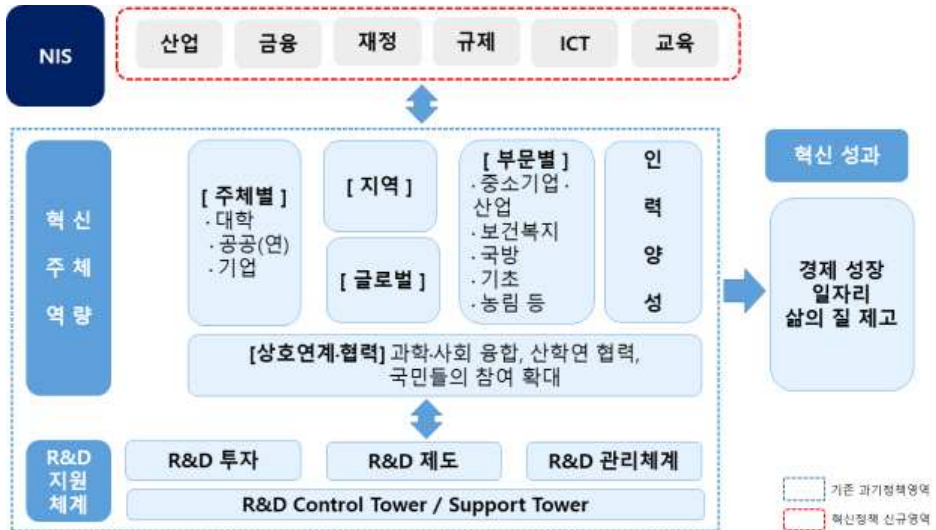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혁신정책과 기존 과기정책의 비교(예시) >

구분	기존 과기기술정책	과학기술 혁신정책
정책방향	과학기술 진흥·발전 중심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의 R&D 역량강화	국가·사회 현안해결 중심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
	양적 투입·산출 중심 기초연구 투자규모 2배 확대	정책의 질적 효과 중심 R&D 투자 1억원 당 GDP 10억원 증가효과 창출
정책범위	R&D 위주 정책수단 이공계 교육, 연구인력 지원	R&D·비R&D를 포괄 이공계교육, 연구인력 지원 + 대학운영 혁신, 신규채용 조세특례 등

< (참고)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2.0) 개념도('18.7, 국가 R&D 혁신방안) >



-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 확대

< 기존 기본계획과 5차 기본계획의 특성비교(예시) >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전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산업 관계부처의 R&D 관련 정책·사업 취합, 내용 요약 • 수립과정에 ICT·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위주로 참여 • 부처별 ICT R&D 사업추진실적, 정책 수립실적 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디지털전환 정책목표·방향 설정 • 수립과정에 고용, 교육, 산업 등 유관분야 다학제 전문가 참여 • 디지털전환 정책목표 달성도, 부처별 목표달성 로드맵 점검

- 또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인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거(제1~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존 과기기술정책의 주요 내용,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발전적으로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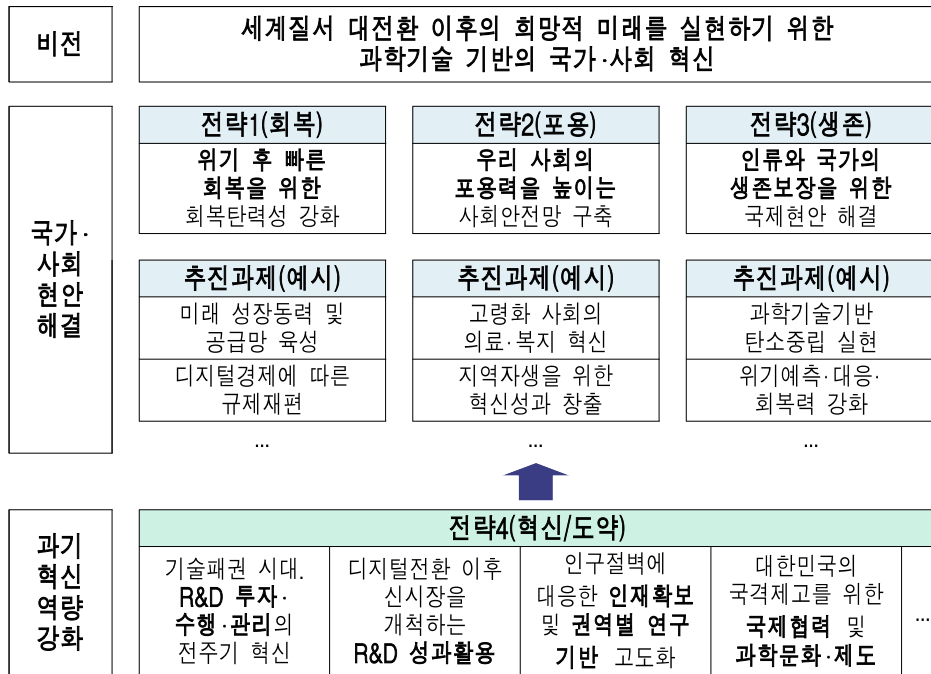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③ 기본계획 구성(안)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구성(예시) >



※ : 과학기술 진흥 관련 / : 국가현안 해결 관련

※ 위 그림의 내용은 예시로, 세부 내용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 기술 측면에서는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20개 내외)하고,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안

* 기존(100개 내외) 대비 기술건수 대폭 축소, 국내외 동향R&D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대응방향 제시 →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분야별 투자방안 마련

④ 기본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

-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전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
-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하여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



03

국내외 정책이슈

국방 분야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20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 도입방안을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

* DARPA : 국가안보를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 개발 전문관리기관으로, 인터넷(ARPAnet), 음성인식(Siri) 등 개발에 결정적 역할

< 간담회 개요 >

- 목적 :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연구개발 추진현황을 논의하고,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청취
- 일시·장소 : '21.8.20(금) 10:00~11:30,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유성구)
- 참석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책국장 등 4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등 5~6명
- 주요 논의내용 : ① 첨단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논의
 -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연구개발 추진현황 도전적 수요 발굴방안, 연구개발 추진 시 애로사항 등 논의
 ②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 구축 등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토의

-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로 직결되는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군 협력 방안과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미래전장에 활용될 혁신적인 신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사업의 현황을 발표하였고,
 -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과 우리나라의 도전적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고등연구계획국 운영방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 간담회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이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볼 때, 안정적 지원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체계와는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 갈수록 심화되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 구축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도전적 연구개발 운영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수소경제 4대 분야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1조 2,739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 산업부는 '19년부터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지역 특화모델 발굴 및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 수소경제 4대 분야(생산, 저장·운송, 활용-연료전지/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5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 '20년부터 지역별 예타사업 신청을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및 재정 당국과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후 마침내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
-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역 강점요소를 반영하여 수소 생산인프라, 저장·운송 산업지원 등 지역별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
 - ① 그린수소 생산(전북) : 새만금 연계 100MW 규모 수전해 설비단지 조성 등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 ② 바이오·부생수소 생산(인천) : 수도권 매립지 활용 바이오가스 연계 수소생산 및 부생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추진
 - ③ 저장·운송 인프라(강원) : 삼척 LNG 기지 활용 액화플랜트 구축 등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추진
 - ④ 연료전지·발전(경북) :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부품성능평가 및 국산화 지원 등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⑤ 수소 모빌리티(울산) : 수소차 및 수소 지게차 등 건설·산업기계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개요 >

구분			사업비(억원)				주요 내용(사업기간: '23~'27)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생산	그린	전북	1,288	508	1,950	3,746	새만금 연계 100MW규모 수전해 설비단지 조성, 그린수소 산업 통합지원센터 구축
	바이오·부생	인천	1,172	537	694	2,403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연계 수소생산 인프라, 부생수소 생산설비 구축
저장·운송		강원	675	497	1,787	2,959	삼척 LNG기지 활용 액화플랜트 구축, 수소 저장·운송 산업 진흥센터 구축
활용	연료전지	경북	704	606	553	1,863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기반 연료전지 부품성능평가·국산화 지원 인프라 조성
	모빌리티	울산	1,049	719	-	1,768	모빌리티 역량 기반, 수소차 부품 기술지원센터 및 건설·산업기계 기술지원센터 구축
합계			4,888	2,867	4,984	12,739	-



03

국내외 정책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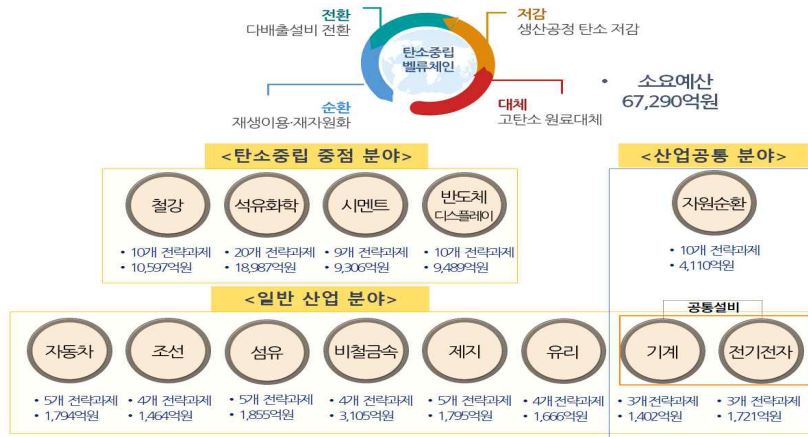
산업부, 6.7조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기획(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총괄위를 개최하고, 총 6.7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예타 기획(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이번 예타 기획(안)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1단계 기술개발로 업종별 작업반 및 업종별 탄소중립위원회, 기술 수요조사, 업계 간담회 등 산업계 수요를 조사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먼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섬유·비철금속, 제지, 유리 등 일반 업종, 자원 순환 등 13개 업종으로 제조업 전반을 포괄
 - 또한, 업종별로 탄소 배출 경로를 조사하여 고탄소 원료·연료 대체기술, 생산 공정 탄소 저감 기술, 탄소 다배출 설비 전환 기술, 탄소 재자원화 순환 기술 등 공정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
 -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
-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철강업종**은 수소환원제철, 초고속 전기로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에 1조원, 석유화학은 전기 가열 나프타 분해 공정, 나프타 대체 바이오원료 개발 등 20개 전략과제에 1조 8천억원, 시멘트는 탄산염 등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및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 9개 전략과제에 9천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식각/증착/세척 공정용 대체가스 기술 등 10개 전략과제에 9천억원 규모를 기획
 - **섬유**는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 및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 및 부직포 제조기술 등 5개 전략과제에 1,800억원, 비철금속은 수소 환원 합금철을 포함한 비철 제련 신용용 기술 등 4개 전략과제에 3,100억원 규모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자동차**(1,700억원 규모), **조선**(1,400억원 규모), **제지**(1,700억원 규모), **유리**(1,600억원 규모) 등의 업종에도 탄소중립 공정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
 - 또한, **기계**(1,400억원 규모), **전기전자**(1,700억원 규모)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산업 공통설비를 중심으로 수소 보일러 등의 과제를 기획하였으며, 생산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분야에도 4,100억원 규모의 과제를 포함
- 산업부는 9월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
- 또한 산업부는 이번 예타 기획(안)에 포함된 기술 외의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R&D 사업 및 신규 비예타 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



ISSUE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안) >



- 한편, 산업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주요 기술 및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 넷제로테크를 개설(8월 25일)
-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예타 기획(안)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예타 통과를 위해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업종별 주요 기술분야 >

업종	주요 기술분야	사업비
철강	• 수소환원제철 개발 / 초고속 전기로 개발 / 저탄소 신열원재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	10,597억원
석유화학	• 나프타 대체 바이오 원료 개발 / 전기 가열 분해 공정개발 / 플라스틱 고급 열분해 기술 등 20개 전략과제	18,987억원
시멘트	• 탄산염 등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 수소 연료를 이용한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 9개 전략과제	9,30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 식각/증착/세척용 공정용 대체가스 개발 / 고효율 대용량 전열식 스크러버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	9,489억원
자동차	• 단조, 열처리 등 공정 전반의 저탄소 공정 혁신기술 개발 / 에너지 혁신형 초고강도 프레스 기술 등 5개 전략과제	1,794억원
조선	• VOCs 처리 기술, CO ₂ 용접 대체 기술 등 저탄소 공정 기술 / 야드내 탄소저감 기술 등 4개 전략과제	1,464억원
석유	•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 / 바이오매스 기반 석유 및 부직포 제조기술 등 5개 전략과제	1,855억원
비철금속	• 수소환원 건식용융 공정 개발 등 비철제련 신용융 기술 / 고효율 친환경 비철금속 공정 혁신 등 4개 전략과제	3,105억원
제지	• 무탄소화 제지 건조공정 개발 / 지류(紙類) 경량 구조화를 위한 공정 고효율화 기술 등 5개 전략과제	1,795억원
유리	• 탄소염 유리 원료 대체 기술 / 화석연료 대체 유리 용융로 등 저탄소 유리 용융 및 공정 혁신 등 4개 전략과제	1,666억원
기계	• 무탄소 연료(수소/암모니아 등) 기반 산업용 보일러, 공업로 개발 등 3개 전략과제	1,402억원
전기·전자	• 친환경 절연소재 기반 전기기기(변압기, 개폐기 등) 개발 / 전동기 효율 혁신 설계 및 제조 기술개발 등 3개 전략과제	1,721억원
자원순환	• 재생자원의 저탄소산업 원료 소재화 기술 /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생애주기 순환경제 기술 등 10개 전략과제	4,110억원

03

국내외 정책이슈

01.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I.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 자상한 기업과 같이 미거래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 상생기금(억원) : ('16) 1,500 → ('20) 2,572 / 상생결제액(조원) : ('16) 66.7 → ('20) 119.8
 -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상생협력은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함
 - *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인건비임대료(139억원), 상생보증(226억원) 등 지원
 -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관행도 개선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
 - * 현금결제비율(%) : ('16) 57.5 → ('18) 62.5 → ('20) 83.7
-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
- 기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도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이번 대책은 4대 추진전략(△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12개 세부과제로 구성

II. 세부 내용

Ⅰ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1) 자상한 기업 2.0 추진

-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

구분	자상한 기업 1.0	자상한 기업 2.0
선정분야	무작위 선정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ESG 등 중점분야 선정
협업체계	개별 협약 내 상생협력	협업으로 자상한 기업·협단체·정부간 입체적 연결

-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



-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하여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

* (사례) LG화학은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자상한 기업 1.0)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자금과 노하우 지원(1,000억원 규모)

(2) 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요구에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을 촉진
-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민관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 * 참여 대기업(개사) 추이 : ('18) 4 → ('19) 10 → ('20) 18 → ('23 목표) 36
-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 완화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

(3) 개방형 혁신 방식의 상생협력 확대

-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
-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 마련*과 신탁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현장의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할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거래 지원방안 마련 예정('21)
-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BIG3)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

②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1)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

* R·D·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정책자금 한도상향, 보증료 감면 등 우대



FOCUS

(2)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 강화

-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
-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

* '18~'20년, 67개 대기업 등과 11조 9,108억원 규모의 자율협약 체결

** (사례) 두산 : 영세 협력사의 근로자 임금 및 4대 보험금 인상분 지원,
삼성물산(건설) : 협력사의 안전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롯데하이마트 : 물류 파트너사 대상 공공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3) 상생협력을 통한 판로 확대

-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제도 마련할 계획

* 제품 수(개, 누적) : ('21) 150 → ('22) 200 → ('23)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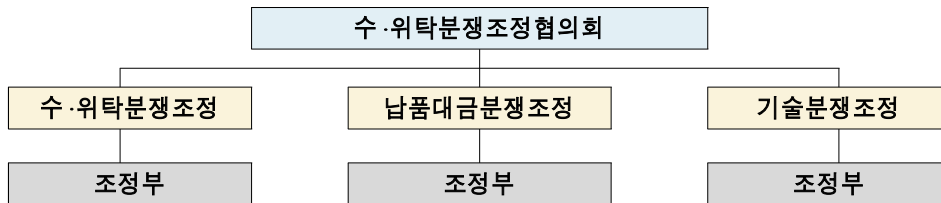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
-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

③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1) 자율조정협의 활성화 및 피해구제 지원

-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상생협력법 개정)함

*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



- 납품대금 조정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상생협력법 개정)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하여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제고

현행	개선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1개 이상 지표의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재료비·노무비경비 증가액의 합산분이 잔여 납품대금의 일정수준(예: 3%) 이상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을 추진(상생협력법 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1.5~5.1점)하고,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2) 공정거래 조성을 위한 감시망 강화

-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중견기업특별법 개정)하여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

* 수위탁거래 30개 영역 중 하도급거래(7개 영역)와 중첩되지 않는 23개 영역

-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계획(상생협력법 개정)

(3)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

-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상승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쇠퇴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지역상권법, '22.4 시행)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상생협력법 개정)

④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1) 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

-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

* (현행) ① 기금출연 → ② 상생협력 사업 추진 → ③ 지원금 지급

(추가) ① 상생협력 사업 추진 → ② 기금출연 및 지원금 지급

(2) 인센티브 강화

-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

대기업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 우대, R&D 지원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중소기업	대·중소 공동 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사내벤처 육성사업 선정 우대 등

(3) 민간자율 상생협력 추진체계 정비

-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